민주-통합신당 '중도통합민주당' 창당 선언

"중도개혁세력 대통합 출발점"

단일지도체제 15일 창당…汎與 양당체제로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4일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오는 15일께 '중도통합민주당'(약칭 통합민주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의 양당 체제로 재편됐으며 양당은 범여권 통합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상천, 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이 신설합당 방식으로 합당하는 내용의 통합선언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이날 통합선언문에서 "이번 통합을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 중도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에 문호를 개방한다"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통합의 새싹을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의 거목으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통합수임기구 회의를 거쳐 합당을 결의하고 15일께 중앙선관위에 합당 등록 및 '중도통합민주당'을 신고하는 것으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달 하순께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통합민주당의 지도체제는 민주당 박상천, 김한길 공동대표가 합의제로 운영하는 단일 지도체제로 정해졌으며 주요 회의 주재와 대외행사 참석은 연장자인 박 대표가 맡도록 했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각 6명씩,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은 75명씩 양당 동수로 구성되며 시·도당은 1개월 이내에 개편하기로 했다.

핵심 당직은 양측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내의석이 많은 신당이 원내대표를,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이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은 공동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민주당은 창당 직후 대통합과 외부인사 영입을 위한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각 정파와 시민사회세력을 상대로 한 통합교섭에 착수하고 '대통령 선거대책본부'를 발족, 경선룰과 공약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운영의 무게중심은 상시적 당 운영이나 원내 활동보다는 ▲대통합과 ▲대선주자 영입 등 외연 확대 작업에 쏠릴 수밖에 없다. 양당은 우선적으로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각 정파와 시민사회세력을 상대로 한 통합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양당은 또 창당 직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다. 특히 선대 본부 산하에 후보경선준비위와 정책개발위를 두고 경선 룰과 공약개발을 논의하면서 외부주자들의 '동참'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장 배분 문제. 양측은 통합정당 내부에 특정 기구를 구성해 한 달 이내로 조직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내년 총선공천과도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직통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부 잡음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우리당 서갑원, 지병문, 강기정 의원(왼쪽부터)이 중도통합민주당 창당과 관련해 '총선용 소통합'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汎與 주도권 경쟁 본격화

통합민주, 몸집불리기 영입작업

우리, 시민사회세력과 연대 모색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4일 '중도통합민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범여권 세력판도가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양당의 본격적인 세 대결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출범으로 일단 34석(유선호 의원 포함) 규모의 원내 제3 교섭단체지만, 이미 열린우리당을 선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내 호남 출신 등 일부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한 영입작업이 시작되면 40~50석 규모로 몸집을 불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유선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입당을 통한 통합민주당 참여를 발표하면서 우윤근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동참 가능성을 밝혀, 본격적인 이합집산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창당 합의로 선수를 뺏긴 열린우리당에서는 정대철 상임고문과 문학진 의원 그룹이 15일 탈당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의원들의 개별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 107석인 의석 수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학진 의원은 "박상천, 김한길 대표 두 분이 일단 수고는 했고 대통합으로 가는 디딤돌 중 하나가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지만, 배제론의 불씨가 언제 다시 살아날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가 탈당하겠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창당 합의에 따라 한때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민주당 김효석·이낙연·신중식 의원 등이 '대통합 지향'을 전제로 창당에 합류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당 지도부가 추진해왔던 기획 탈당을 통한 '제3지대론'은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소속의원들의 추가 탈당 움직임을 최대한 만류하면서 이날 결성을 선언한 '민주평화국민회의'와 통합번영미래구상 등 시민사회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민주당 현역의원이 빠진 또 다른 '소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당 밖 친노그룹인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진입하면 열린우리당은 친노와 개혁 색채가 좀더 짙어지는 70~80석 규모의 정당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중도보수 소통합' 대 '중도진보 소통합'의 세력 대결 국면이 한동안 지속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양측의 명분 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측은 이번 창당 합의가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다단계 통합의 1단계를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총선용 소통합에 불과하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연합뉴스

배제론 '동상이몽'

박상천 "완전 철회 아니다"
통합신당 "이미 물 건너가"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4일 오후 합당선언식을 갖고 중도통합민주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지만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특정세력 배제론'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소통합과 배제론에 대한 범여권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데다 대통합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일부 원내외 인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양당이 이날 발표한 '통합선언문'에는 '특정세력 배제론'과 관련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통합선언문에 '특정세력 배제론'를 명문화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배제론이 철회된 모양새다.

그러나 통합신당 측은 민주당의 특정세력 배제론 철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 실패 책임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우선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4일 중앙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배제론을 합당선언문에 넣지 않은 것은 통합신당이 '우리당이 친정인데, 국정 실패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하는 등 이견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필연적 기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배제론을 철회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당의 국정 실패가 희석되는 등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박 대표의 입장은 당장은 특정세력을 배제론을 철회할 수 없지만 추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배제론의 대상을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당 측은 "특정세력 배제론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박 대표가 민주당의 원외 강경 인사들을 고려한 정치적 발언일 것"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선언식에서 "포용과 개방의 정신으로 '모든'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주신 박 대표에 감사한다"며 통합의 방점은 '배제'가 아닌 '대통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민주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강래, 전병헌, 우윤근, 김태홍, 노웅래 의원 등 무소속 의원 7명도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배제론의 완전 철회와 제정파 연석회의 등을 통한 대통합 추진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민주당 박상천 대표를 압박했다.

또한, 강기정, 김동철, 서갑원, 정동채, 지병문, 이영호, 김성곤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의원들도 "만약 배제론이 철회됐다면 즉각 제정파 연석회의 구성을 추진하는 등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대통합 위해 대폭 양보 타결"

통합 협상 주도 최인기 의원

"모든 중도개혁세력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도통합신당과의 통합 협상을 이끌었던 최인기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일각에서 이번 신설 합당을 소통합이라는 지적을 하는데 통합민주당은 단계적 절차를 밟아가며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을 이뤄내 오는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최후의 결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통합민주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며 협상 과정에서 50%의 지분도 확보했다"며 "50%의 민주당 지분은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이 이뤄질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통합신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통합의 원칙과 대상 등과 관련, 고성이 오가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털어논 최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막판에 대폭 양보,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며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정세력 배제론은 향후 정치 상황 변화와 국민여망의 변화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에서 온갖 음해와 방해공작이 이뤄졌다고 밝힌 최 의원은 "일부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 중도통합신당 측에 협상을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력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불편함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라는 호남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하는 통합민주당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